

농업경영시대의 희망과 약속

2002. 11. 5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업가족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늘 홀대를 받아오면서도 이 나라의 생명줄을 지켜 오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고, 저에게 국정 운영과 농정에 관한 비전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박홍수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벽두에 선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유전자 기술을 비롯한 각종 첨단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내일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가 확대되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새로운 세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선진강대국들은 농업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사회,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비상한 각오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지 않고는 치열한 국제 경쟁을 뚫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세기 말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사적 변화의 관객이 아니라,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동북아 시대의 중추국가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광활한 만주와 시베리아의 개발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보고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화해 협력과 철도 연결 등의 각종 경제 교류 확대 사업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이며, 장차 전개될 동북아 시대에 한반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위대한 신한반도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저절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의 냉전적 인식을 극복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과감한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특권을 누려 온 사람들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발전을 바로잡아, 지방, 특히 농어촌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 온 저 노무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요구들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농업경영인 여러분!

저는 평소에

미래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말할 때 농업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말한 “농자천하지대본”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농업은 단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농업관과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는 바로 농업의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눈부신 산업화도 바로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 어린 농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농업은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지금도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다 휴대폰을 팔기 위해 마늘을 희생시켰습니다. 칠레와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 포도와 과수산업, 한우와 양돈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농업이 이렇게 구박받아서는 안됩니다.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이고 바로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역분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농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있고,

국정의 책임자가 확고한 농업관을 가지고 있다면,

또 국민이 여기에 호응한다면,

우리 농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 정책

이제 저의 농업 정책 구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제의 안정」 분야

첫째, 농가경제의 안정에 관한 정책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쌀 자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쌀은 우리농업의 근간입니다.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70%의 농민이 쌀을 재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쌀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 ▶ 우선 쌀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 아울러 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의 지원 단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나아가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중심의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쌀은 우리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적정규모의 농지 보전과 생산기반 정비는 쌀산업 보전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특히 생산조절 정책을 펴는 논에 대해서는 '휴경보상 직불제'를 도입하고 언제든지 주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점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농가부채입니다.

농민들이 땀흘려 일을 해도 소득은 낮고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농산물가격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재해때 피해 현장에서 저는, '홍수와 태풍으로 농작물 소득이 없어 올해 부채 상환은 둘째치고 내년도 영농자금도 당장 걱정이다'는 절망 어린 호소를 들었습니다.

결국 빛이 빚을 낳고 그 빚은 또 빚을 낳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농어민들이 쓰고 있는 부채특별법에 규정된 단기성 상호금융자금을 정책자금처럼 장기분할하여 상환하도록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 ▶ 아울러 금리인하 추진과 농업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여 연대보증을 대폭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WTO 협정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매년 삭감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7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있어 추곡수매도 불가피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소득만큼 정부가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농업소득의 40%가 직접지불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저는

- ▶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소득의 20%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는 해마다 수급불균형을 가져오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의 월마트, 카르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 농산물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나가고 있어, 농산물 유통구조의 올바른 개선 없이는 경쟁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가격보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영도매시장내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주요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생산자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밀착형 직거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생산이익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포장, 판매, 수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를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유통구조의 일대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농업선진국들의 발전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 ▶ 2004년에 끝나는 농특세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운용 내역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 이와 함께 농업예산 규모를 정부 예산의 10%수준에 이르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 갈 주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 특히 우리 농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복지』 분야

셋째, 농어촌 복지 정책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정작 농촌에서 사는 농민들은 열악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돌아오는 농촌”이 되기에는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 농어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들 교육문제입니다.

나는 비록 고생을 하지만 내 자식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농촌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살면서도 자녀들이 대학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확충하여 농어민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의료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농부병, 노인병 등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질병 치료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분야가 재해대책 문제입니다.

어릴 때 늘 황금물결을 볼 수 있었던 제 고향 김해 별관은 올해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를 두고 천재다 인재다 논란을 벌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수십년 간 농업정책이 걸돈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농작물재해에 대한 복구비의 정부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자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또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최저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WTO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협상 목표에 맞추어 국내 농업정책을 미리 정비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산물분야의 통상협상에 앞서 '선대책 후협상' 방식을 철저히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늘협상의 실패처럼 통상협상을 밀실로 하지 않고 민·관·학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한·칠레 FTA는 이미 칠레와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그 득실을 따져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우리의 농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비교우위론' 같은 논리에 농업이 희생당하는 일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은 단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기대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농업의 희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정의 책임자가 새로운 시대의 국가비전과 농업관을 가지고 있고,
농업의 주체인 여러분의 열망과
또 국민이 여기에 호응한다면,
우리 농업은 세계화의 파도를 넘어 동북아 시대,
한반도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저 노무현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